



저물어가는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아쉬움 가득한 발자취지만 남은 결실을 위해 추슬러본다. 삶은 쫄쫄했지만 힘차게 살아낸 우리이기에 더욱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빛날 수 있게, 한 걸음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말이다. 새로운 희망이 마음에 담길 수 있게 해진 것들은 바다 위 고이 떠나보내자. / 사진 이창훈

내년 예산·주요 안건 심사 ‘주목’

12월 19일 제412회 임시회 개회
도정 첫 조직개편안 등 안건 처리
보전지역 관리조례개정안은 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굵직한 주요 안건들이 상정,
귀추가 주목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2월 19
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
작으로 23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과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교육청 조직개
편안과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
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돼 처리됐다.

제주도의 추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5451억원 증액된 7조7883억원 규모
다.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은 기정 예

산보다 571억원 증액된 1조7095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조례도 이번 임
시회에서 심사, 수정 가결됐다.

조직개편안을 통해 도지사 직속으로
대변인과 소통청렴담당관, 도시균형추
진단이 신설되고, 제주시에 1국 2과,
서귀포시에 1개 사무소가 신설된다. 기
존 소통혁신정책관은 폐지되고 카지노
정책과, 건축지적과와 도시디자인담당
관 등은 통폐합된다.

공무원 정원은 기존 6482명에서
6519명으로 37명 늘어난다. 제주도청
은 기존 3409명에서 3416명으로 7명,
도의회는 142명에서 145명으로 3명,
제주시는 1718명에서 1740명으로 22
명, 서귀포시는 1213명에서 1218명으
로 5명이 각각 증원된다.

주민발의로 재추진된 ‘제주도 보전지
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했고, 제주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은 원안대로 교육
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예산안을 꼼꼼하
게 살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특히 이번 임시
회에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철학을 펼쳐나갈 첫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이목
이 집중되고 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
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
했다. / 개회사 2면

지면 안내

총 합 ▶ 1

제412회 임시회 개회사 ▶ 2



의회 주요 이슈 ▶ 3~4

예산 심사 쟁점 ▶ 5~7

주요 안건 처리 요약 ▶ 8

함께 합시다 ▶ 9

생생 의정 활동 ▶ 10~11

기 고 ▶ 12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제412회 임시회 19~23일
김경학 의장 개회사서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2월 19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412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주어진 기간은 짧지만,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철학을 펼쳐나갈 첫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 공직사회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특히 “오영훈 지사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생·경제·복지·미래’를 키워드로 개편했다는 조직이 민생안

정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광산업과 경제회복은 물론 복지와 안전을 컨트롤해 나가기에 조직과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됐는지도 검토하겠다”며 “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돌봄을 비롯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경학 의장은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동참을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주춤했던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감환자도 급증하면서 ‘트윈데믹’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광범위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선 예방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한파가 시작됐다. 추운 겨울이 더 힘든 분들이 있다”며 “주위를 둘러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연말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주 4·3교육을 위촉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전문)

지난 11월 9일, 교육부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모든 교과와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핵심요소인 학습요소를 삭제하고 있다.

예고안대로라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Ⅱ 교육과정에 기존에 제주4·3사건을 명시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까지 삭제되어 교과서에 제주4·3을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출판사 집필진에 따라 제주4·3의 서술 유무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교육과정에 제주4·3이 위축될 수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기억해야 할 역사이고 지켜야 할 역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00년 이후 4·3특별법이 제·개정되어 추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희생자 배·보상은 물론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 등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즉, 지난 70년 동안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게 전승하여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2018-

162호 고시에 따라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제주4·3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학습요소로 반영되어 서술되었다.

제주4·3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난 5년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고, 제주4·3의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향해 가는 진일보한 시간이었다. 이에 제주4·3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제주4·3교육을 위촉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질곡의 세월 속에 신음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을 생채기 내는 것이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제주4·3을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자리하는 제주4·3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도록, 제주4·3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도의회·도, 내년 국비 확보 두손 맞잡아

‘국비 확보단’ 국회 방문
예산 추가확보 총력
지역 현안 해결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전력을 쏟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구성한 ‘2023년 제주도 국비 확보단’은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비 추가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비 확보단의 공동단장인 김경학 의장과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강충룡 국민의힘 원내대표(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

장을 만나 제주지역 15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해녀의 전당 건립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제주 4·3추모제 확대 등 총 15개 사업, 총 770억원 규모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정수 및 하수, 폐기물 처리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증설을 위한 예산이 시급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4·3추모사업과 해녀의 전당 건립에도 여당 차원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 영예

제15회 국정감사시상식서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올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제15회 국정감사 시상식’에서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법인 (사)한국유권자총연맹 주최로 열렸으며, 매년 국정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시상하고 있다. 시민단체 모니터원들과 별도 의정활동 검증절차를 통해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행정 대상,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대상, 우수기업 및 올해를 빛낸 사회 공헌 대상, 총 4개 분야별로 시상을 진행했다.

김기환 의원은 유권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공



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유권자분들께서 주시는 상이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성심을 다해 유권자인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학 의장 연말 맞아 ‘민생현장 속으로’

12월 12일 ‘환경미화원’ 변신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이 연말을 맞아 민생현장의 고충 파악에 나섰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 12월 12일 새벽 ‘일일 환경 미화원’으로 변신, 화북동 일원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섰다. 환경미화원과 함께 수거 활동을 전개한 뒤, 간담회도 진행됐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실태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오후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종사자 및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김 의장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인 벤엘과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를 방문해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동절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벽부터 깨어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과 겨울철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지원 시설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지자체-교육청, 거버넌스 고려해야”

교육위원회 교육발전포럼 개최
거버넌스 구축 통한 해법 모색

학교와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가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가 지난 12월 9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한 교육발전 포럼에서 이같이 나왔다.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자녀 돌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나 개인 가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청과 도정, 민간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제시한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조금 열악한 상황이다. 열악한 재정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들은 상호협력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금’ 등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민철 교수는 이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부족한 재원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분절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함께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한편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관, 학, 산이 같이 공존하며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며 “교육 협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해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 난제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해결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 토론회는 김정훈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장이 좌장을 맡고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박남제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도 양순철 평생교육과장, 오성남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첫발 디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대학교 12월 13일 간담회 개최
지방대 정책 현안 논의…특수교육학과 신설 적극 노력키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대학교 (총장 김일환)가 지난 12월 13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양 기관의 협력 방안과 지방대학의 정책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대학교는 향후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 모델 정립을 위한 지자체, 대학 및 기업 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도의

회-제주대 연구 상생협력체계 구축 △지역 필수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과 개설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특수교육학과 신설 및 제주대학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경학 의장은 “지자체-대학-기업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과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취업 연계를 통



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도 제주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또 “앞으로 도내 대학교와 제주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저 지하 유출수...정확한 연구·조사 필요

12월 12일 농수축경제위원회·정책입법담당관실 토론회 개최



해저 지하 유출수를 제주의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와 정책입법담당관실은 지난 12월 12일 오후 호텔 시리우스에서 ‘제주도 해저 지하 유출수(SGD),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

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용철 연구원은 ‘SGC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용철 연구원은 “해저 유출 지하수는 제주도과 같은 도서 지역의 수자원 확보·활용·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수자원의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다”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해저 지하 유출수의 공간적·시간적 유출 특성에 대한 기본 조사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 제주도 중심 하부지역의 담지하수와 염지하수의 부존 특성과 제주도 하부 기반암 지하수 연구와 근

해 대륙붕 지하수 매장지 분포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제주는 새로운 수자원의 연구가 절실하다”며 “제주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하수 보존과 새로운 수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의 의원은 “바다 밑에 흐르는 해저 지하 유출수에 대해 오늘을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해저 지하 유출수에 대한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제주도 분원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5년만’ 제주비엔날레 적극적 홍보 당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월 23일 현장 방문
행사 운영상황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지난 11월 23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분과 의정자문의원들과 함께 5년 만에 열리는 제주비엔날레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안정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그동안 지적됐던 행사 전

담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 문제 등 개선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제주비엔날레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제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도내 문화행사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게 이뤄져 지친 도민들의 삶에 활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제주 문화예술 발전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도 세심하게 살피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제주비엔날레는 지난 2017년 처음 개최됐으나 이후 코로나

19등으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마 위…예산 과다·실효성 의문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서
위원회 수당·회의비 중복 편성 지적, 도민 갈등 등 우려

행정자치위원회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예산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읍)는 지난 11월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편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비 등을 꼬집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에 연구용역 15억원 외에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수당, 도민 설명회 개최 등의 비용이 별도로 편성됐다”며 “여러 갈래로 나눠 목소리를 내면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연구용역이 무의미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예산이 1억원이다. 회의가 1년에 24번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용역이 진행 중인데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 회의하는 것이 맞느냐”며 “도정이 메시지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면 도민들 에너지만 소진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근거로 제시될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2024년 총선 시즌과 맞물리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읍)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라며 “오 지사는 지난 도정 질문에서 법적인 절차가 완

료된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12월 중순쯤에나 나온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내년 12월 중순쯤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여 일 앞둔 시기다. 사실상 국회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라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도정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법률 개정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가파도 프로젝트의 사업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

왔다.

한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내년 예산안 외에도 가파도 프로젝트에 2027년까지 5년간 65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제시돼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예산이 투입돼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권 의원은 이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병행해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주체가 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촘촘 복지’ 헛구호·순수 복지 비율도 후퇴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서 끼워 맞추기식 사업 지적
제주지역 실정 맞지 않은 저류지 설치 문제도 제기돼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촘촘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했던 것과 달리 정작 사회복지 분야 증가율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특정 병원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걸로 드러나 조정이 요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

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11월 2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편성한 사회복지 예산을 두고 질타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 예산은 도전체 예산의 22.0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과 사업인 더 큰 내일 센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이 사회복지 예산이냐”고 지적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어 “올해 순수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2%였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19.9%로 더 후퇴했다”며 “2024년부터는 기획조정실과 의논해 세부사업명을 조정, 실질적 사회복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26억원 가량으로 인건비만 19억원”이라며 “거액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미 위원장 역시 “해당 위탁 기관이 70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같은 건물 내 훨씬 작은 면적을 가진 사무실 임차료보다 2배 이상 지급하고 있다”며 “건물 주인과 해당 위탁

기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저류지 설치 문제를 비판했다.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중산간 지역을 기점으로 대규모 저류지가 설치됐지만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저류지를 설계할 경우 설치 예정 위치를 기점으로 유역을 산정하는데 상당수의 저류지가 그 유역 내 습곡 등 투수층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계획됐다”며 “이 때문에 비가 내리더라도 저류지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이어 “저류지 설계 시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용역진에 의한 표면조사로만 설계되면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저류지가 설치됐다”며 “지역주민 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저류지에 물을 한 시적으로 가둘 수 있도록 설계해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등 다목적 활용방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시천 정비사업 친환경적 하천정비계획 아니” 심사 보류

환경도시위,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원안 의결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공감대 형성이 먼저” 지적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12월 1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원안 의결 결정을 내렸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대 풍력발전지구에 100MW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다만 심각한 환경 훼손의 우려가 나오는 만큼 훼손 수목 최소화 및 수목 이식계획 수립, 폐패널 처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준공 후 10년간 사업지구 내 식생변화 모니터링, 태양광

패널 유지 관리시 토양오염 저감방안 마련 등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현기중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마라도 면적의 2.5배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면서 1만2734주를 훼손하는데 55%인 6983주 이식만을 계획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본 사업으로 인해 식생보전등급 2~4등급이 감소하고 5등급이 증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조성지역 수림과 식생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가시천 하천정비 사업’은 부동의 의결로 제동이 걸렸다. 앞선 410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사안으로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시천 하천정비사업이 친환경적 하천정비계획이 아닐뿐더러 주민들에게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심사 보류 의견을 내었다.

이번 재심사 과정에서 “가시천 범

람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천 범람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사전평가가 부실하다”고 ‘가시천 하천정비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 사유를 명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사업을 두고 도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목소리를 냈다.

현기중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15

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과 관련해 “용역에서 15분 도시 개념부터 방향까지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비전 선포식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이어 “용역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고,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과 공감대 형성이 아직 덜 됐는데도 9000만원을 들여 15분 도시 비전 선포식을 하는 건 삼폐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문화예술분야 홀대 심각” 비난 거세

문화예술인 어려운 상황에 새해 예산 올해보다 줄어
관광업 혜택 항공사·공항에 집중 ‘속 빈 강정’ 지적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분야 예산 홀대론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문화예술 홀

대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은 “도정질의회에서 지사에 게 약속받은 문화예술 예산은 7%대”라며 “도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0.51% 증가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증감률은 6.19%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1.56%에 그친다. 산하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0.72% 감소했다”

고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코로나 직전 2020년과 내년 예산을 비교하면 제주도 전체 예산은 21.31% 증가했지만, 문화예술 증감률은 7.9%”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마저 홀대받고 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도 4.18%에서 내년 4.0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정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이 기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다고 꼬집으며 “한정된 자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승아 위원장도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예산 2억은 너무 쉽게 반영돼 화가 난다”며 “기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키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올해 보조금사업 중 포기한 사업들이 10건을 넘는데 일부가 내년 보조금사업으로 다시 올라갔다”며 “올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패널티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런 사업들이 보조금 심의위에 통과됐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11월 29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는 관광업으로 인한 혜택이 항공사와 공항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삼도2동)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자 오히려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도 “관광업으로 인한 수익은 상당하지만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관광 수익의 숫자만 매어있는 것 같다. 도민들에게는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실무부서 ‘왜곡 보고’...농·어민수당 연내 지급 불발

심의위 회의 전부터 이미 ‘내년 결정’ 확인돼 논란 불거져
태양광 출력제어 보상비 “지방비보다 한전·국비 바람직”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어민 수당 탈락자에 대한 연내 구제 불발이 실무부서의 왜곡 보고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제기됐다.

농민수당과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전업 농민, 농어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직장 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거 탈락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탈락자에 대한 수당을 올해 지급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급 시기는 내년으로 결정됐다.

앞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농민수당 탈락자에 대한 구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두고 “농민수당 심의위원

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 이미 도 실무부서가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못 박아 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연호 위원장은 “도정에서는 ‘내년 지급’을 결정한 부분이 지난 9월 15일 간담회때 농업인단체장들이 주장해서라고 했다”며 “하지만 농민수당심의위원회 간담회 자료에는 농민수당 탈락자 구제 시기를 내년으로 결정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농민수당 심의에 참여한 단체장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다 결정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라고 했다”면서 “앞으로는 사실 그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또 “농민수당과 어업인 수당이 새롭게 시행되는 수당이다 보니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했다”며

“집행부와 의회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어민수당의 경우 직장 가입 이력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을 차별 둘 수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 고수로 두 수당의 탈락자 구제는 모두 내년에 이뤄질 계획이다.

이어 11월 24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 보상을 위

한 예산 편성을 두고, 적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박호형 의원은 “도내 출력제어는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모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풍력발전까지 보상을 확대해야 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하더라도 제주도가 부담하기보다는 한국전력이나 국비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매입 무산...사업 타당성 부족

교육위원회, 내년도 예산심사서 전액 삭감
안전 민감 시기 “스프링클러 설치 서둘러야”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사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조성하려는 ‘종합교육지원센터’ 사업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는 지난 11월 28일 202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제주도교육청기

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제주시 일원 한 건물을 매입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가칭)’로 활용한 결정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토지와 건물 매입비로 140억원, 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25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건물에 대한 주차

장과 건폐율,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증축이 불가해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별도 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적정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당초 건물매입 목적은 도교육청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하면서 그 목적이 혼동된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은 또 “해당 건물에는 특수 학생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인지 의문이 든다”며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의 재검토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설 확충과 특수교육센터 설치의 별개인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계수조정을 마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과 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당초 제주도교육청이 올린 예산액을 전액 삭감, 사업은 무산됐다.

고의숙 의원은 이밖에도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오등봉공원 초등학교 신설을 계획하면서도 원도심 학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전체적인 그림도 없이 교육 정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은 도내 특수학교·기숙사에 내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주문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황국 의원은 “적어도 아이들이 밤새 머무는 기숙사와 재난에 취약한 장애학생이 있는 특수학교에는 스프링클러가 100% 설치돼야 한다”며 “3년까지 미루지 말고 내년에 모두 설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의정 주요 조례안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항국 의원

공동발의: 김창식·오승식·정이운·이남근·
현기중·송영훈·한동수·고익숙·양홍식·현지홍·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성의 의원

공동발의: 양홍식·강동우·김승준·홍인숙·
현길호·현지홍·양경호·한 권·한동수·강경흠·
정이운·정민구·박두화 의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사업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 사업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호형 의원

공동발의: 김경미·김기환·양영식·이경심·
이상봉·양병우·현지홍·원화자·강하영·강경문 의원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 조례 시행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에도 장수축하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강철남 의원

공동발의: 김경미·송영훈·양병우·한 권·
양용만·강동우·김창식·현지홍·원화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 △변호사,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 지원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원봉사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상봉 의원

공동발의: 정민구·현길호·김경미·양영식·
정이운·이경심·한동수·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 4년 단위로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시행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강동우 의원

공동발의: 김항국·송창권·홍인숙·강하영·
오승식·양홍식·정이운·이상봉 의원



도내 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과학실 보호장구·안전설비 관리 및 구비계획 등이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이승아 의원

공동발의: 송영훈·강봉직·강경문·임정은·
강연호·양홍식·김경미·김기환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승아 의원

공동발의: 원화자·정민구·양영식·홍인숙·
양경호·박두화·강상수·이상봉·강하영 의원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 증진 및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돌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학교·돌봄시설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청탁금지법 Q&A



Q

해당부서에 국장님(공무원)이 퇴직하실 때 부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공로패(감사패)를 제작하여 드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산으로 공로패 제작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공로패(감사패) 제작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절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용은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생활 & 법령뉴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Q

저는 60대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싶는데,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제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 지원자격

- 공공형(공익활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 활동시간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려는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휴한기(12~2월), 휴서기(7~8월)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활동비

-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7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 일자리 신청 방법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www.seniorro.or.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지방의원 포함
- (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기준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의무(제5조) ② 직무관련 부동산보유, 매수신고(제6조)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제8조)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② 가족채용 제한(제11조) ③ 수익계약 체결제한(제12조) ④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 수익 금지(제13조) ⑤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제14조)

* 고위공직자 : 지방의회 의원 포함

• 행위기준별 세부 내용

구분	대상	내용	방법	위반 시 제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직자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포함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제출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 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물품 용역·공사 등 계약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대상	제한행위		위반 시 제재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직자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기능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무에 취임하는 행위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요구·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익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	다음의 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요구·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	공직자가 직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본인·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7년 이하의 징역 •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본인·제3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의회, 서귀포시민 소통공간 본격 운영

서귀포시청사내 의정소통실 현판 제막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는 지난 12월 5일 서귀포시청 본관 3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의정소통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는 서귀포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의원을 만나기 위해 의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청사 내 의정소통실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의정

소통실을 통해 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 담당 부서 직원들과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 “의정소통실이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의 가교가 돼 도민들의 의정 참여를 높이는 소통의 장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 베트남 방한 대표와 면담



12월 8일 제주도의의회 방문서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은 지난 12월 8일 집무실에서 김황국 부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우옌 티 탕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베트남 방한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응우옌 티 탕 상임위원은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제주의 발전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며 “제주도와 베트남이 함께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가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제주도의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제주-베트남 주요 도시 간 직항 개설은 물론 제주-베트남 간 수출 품목 확대, 농·수·축 산업 및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의 역할은?

12월 16일 토론회서 모색
예술계 인식 전환 기회로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의원연구단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대표의원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2월 16일 제주도의의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문화예술이 함께 실천&행동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문화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실행 과제 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도내 예술계 인식 전환 기회 마련과 실질적 방안 모색에 대한 담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박남희 제주비엔날레 감독은

‘제주 비엔날레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와 문화실천’이라는 주제로, 정은혜 에코오트 대표가 ‘기후 위기와 문화행동’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열린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변영근 제주도 문화정책과장, 민경언 커뮤니티 아트랩 코지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문화예술계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 담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는 상황인 만큼 제주사회도 인식개선을 비롯한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주 문화예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서귀포 시민을 위한
'의정소통실'을 운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위치 서귀포시청 의회 협력실 내 (본관 3층)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총무담당관
☎(064)741-2212

대학생 취업 진로·일자리 개선 방향 인식 토론회

11월 25일 도의회·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 포럼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 제주대 명예교수)가 공동 주최로 지난 11월 25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제10회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도내 대학생의 취업 진로 및 도내 일자리 개선 방향 인식'을 주제로 대학생 3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성준 제주지방자치학회장은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세계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종합적이고 전체적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들이 제주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포럼에서 공유되는 대학생들의 제주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인식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길잡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은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중 공통주제를 선정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청소년 의정 체험 운영 관련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청소년 의정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기부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기관에는 3년이라는 인증 효력을 부여하고,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인증마크 사용 권한도 부여된다.

제주도의회는 '청소년 의정 체험'의 경우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하루 동안 도의원이 돼 조례안 찬반 토론 및 표결, 5분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모의 의회 운영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청소년 의정체험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해 제주 미래 인재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청소년 의정체험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해 제주 미래 인재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찾는다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12월 2일 정책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양용만 의원, 국민의힘, 한림읍)는 지난 12월 2일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재생센터와 공동으로 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가 지역의 역사·문화 재생으로 바뀔에 따라 지역문화 특화 재생을 통한 제주도의 지역 균형발전 이슈 및 정책 제시 등 제주도 문화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이상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

연구원이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와 특화재생 방향'을, 김유정 제주문화연구소장이 '오랜 지난 시간의 가치, 제주마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강상수(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오승식(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등이 함께해 의견을 공유했다.

양용만 의원은 이날 "지역특화 개발과 지역문화 원형 보존, 두 가지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도시재생의 관건"이라며 "제주의 오래된 가치인 제주마을의 올레길과 밭담, 해안가의 원담 등 반농반어의 형태들이 특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기록원 설립 추진...타 기관 현장 방문 나서

서울·나라 기록원 등 찾아
기록물 보존·활용 방안 모색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2월 7~8일 타시도 기록원에 방문, 운영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제주기록원 설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기록권을 확대하고 기록물 영구 보존 환경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기록원에서 기록물 생산·보유 현황 관리, 기록물 분류기준 및 평가 체계 관리 등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서울기록문화관에서는 아카이브 등 데이터로 전환된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 전시 서비스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원 방문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기록관리 업무와 전시·열람·문화행사·체험학습장 등 기록정보 서비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에는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역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유서 깊은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세계평화의 섬 활성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제주기록원 설립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록문화 탐방 및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독예방, 수면 위에서 논의할 때”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도의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 때마다 학생과 청소년들의 도박과 마약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변에서는 주변 당사자 외에는 마약과 도박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해 심히 우려스럽다.

혹시 ‘토쟁이·토사장’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토쟁이’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 ‘토사장’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칭한다고 한다.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장래희망이 토쟁이, 토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단순히 청소년들의 치기로만 웃어넘길 수 있을까?

친구들과 무한경쟁하는 학업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레저스포츠 등으로 해소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유희하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높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마트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역시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분명 도박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소년 도박
마약중독 심각
위기의식 못 느껴

이 남 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스포츠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법도박에 빠져들고 있다. 도박 문제에 부수적으로 채무관계, 학교폭력, 절도 등의 심각한 문제들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보호자라고 불리는 우리 어른들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또 하나는 마약 오남용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제주 내 가정집으로 마약이 배달되고, 도내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 청소년들은 ‘진통제, 살 빼는 약, 공부 잘 되는 약’ 등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실정도 나타난다. 마약유통은 불법도박과 유사하게 온라인을 통해

남녀노소에게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약과 도박에 대한 정보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통제 없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런 유해정보는 SNS로 공유전파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해당 문제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학교 및 보호자는 학생·청소년 생활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인지 사회는 청소년 음주·흡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주변을 살펴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도박과 마약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아직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는 관련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마약과 도박은 음지에서 학생들에게 퍼지고 있으며,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중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약·도박 중독에 대한 문제를 ‘쉬~쉬~’하는 시대는 지났다.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 약물 오남용 및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이 수면 위에서 논의돼야 하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실시할 때이다.

“안전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

‘제라’, ‘제라지다’는 말은 제주도민이 아니라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제라진’은 어떤 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이고 표준어로는 ‘최고’, ‘아주’, ‘매우’의 뜻을 가진 제주도의 고유방언이며, 사투리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여러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식탁 위 모습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찌개 종류나 밑반찬이 많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함께 나눠 먹는 것은 말 그대로 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예전처럼 찌개에 같이 수저를 담으며 밥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19 계기
‘제라진-안심식당’ 지정

이 윤 석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음식점에 안전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라진-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다. ‘제라진-안심식당’이란 안심식당 3대수칙(△위생적 수저

관리 △덜어먹는 도구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는 업소이다.

제주도 ‘제라진-안심식당’은 각 관할 행정시의 위생관리과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지정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손님이 안심식당임을 알 수 있도록 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고, ‘제라진-안심식당’ 3대수칙과 관련된 물품인 덜어먹기 실천을 위한 접시, 국자, 집게 3종과 위생적 수저관리를 위한 종이수저집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의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이 일상 회복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토닥토닥’ 행복한 남원읍 만들기

감귤색이 진하게 물들어 가고 귤을 싣고 가는 트럭들로 퇴근길이 분주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틀림없는 겨울의 시작이다. 이러한 풍경은 올해도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한다. 퇴근길에 짙어진 해를 느끼며 막히는 도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연이어 떠오른다. 또 나이를 먹겠구나, 내년이 오기 전에 소식이 친구에게 연락해 봐야지, 부모님 독감 접종 챙겨드려야지 생각하다 어두워진 길가에 자동차들의 불빛에 반짝 빛나는 먼나무의 빨간 열매가 눈에 보인다. 먼나무의 열매를 보면 사랑의 열매가 떠오른다.

사실 사랑의 열매는 먼나무와는 상관이 별로 없지만 조그마하니 빨갛고 동글동글한 모습이 사랑의 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마음 나누는 연말되길

이 선 미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매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다.

사랑의 열매의 세 개의 빨간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의 모아진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자는 나눔의 의미라고 한다. 좋은 뜻이구나 하고 넘겼던 이 의미가 맞춤형 복지팀의 실무 수습을 하게 되면서 남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일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이 들어감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이 모여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만은 따뜻해지길 바란다. 그 과정에 작게나마 나의 손도 보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진다.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 사업의 이름처럼 서로서로 토닥토닥 위로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연말이 됐으면 한다.